"보험사기 미수 매형 수사 외압 없었나"

여야 '김준규 청문회' 도덕성·자질 추궁
박지원 "위장전입자 처벌 할 수 있겠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부인의 2중 소득공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매형 연루 수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위장전입에 대해 "주택청약제도는 '1세대1구좌이기 때문에 후보자와 부인이 별도로 주민등록 세대주를 구성해 사실상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5번씩 위장전입했고, 후보자도 그렇게 했다. 앞으로 주민등록법 위반문제는 전혀 처벌하지 않을 것이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변명할 수 없고 그 점에 대해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사과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아파트 '다운계약'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는 1999년 대방동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구매자에게서 1천940만원을 탈세하도록 방조했고 현재 살고 있는 신동아 아파트를 살 때에는 940만원 정도를 탈세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 인사와 관련,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간부 54명의 분포를 보면 TK(대구·경북)가 14명으로 26%이고, 고검장급에서는 5명의 호남출신 고검장이 다 물러나고 1명만 승진했다"며 "이명박정부의 인사는 '고소영 인사'인데 법무부 및 검찰 고위 간부는 TK, PK(부산·경남)가 48%인 26명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사장급 인사가 끝났다면 하위직 인사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할 때 학연과 지연을 떠나 지역안배와 능력위주의 인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2중 소득공제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는 신용카드 공제 내역과 관련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국민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당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매형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매형이 선박보험 사기 미수와 당좌수표 부도 등 혐의로 연루돼 수배를 받다 46일 만에 자진출두, 부산 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지난 2001년의 사건을 언급하며 "긴급체포 승인이 불과 40분 만에 석방 지휘로 바뀌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을) 전혀 모르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 알았으며, 검찰에 소환될 때 담당 검사에게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매형이 조사를 받으니 잘 챙겨달라는 이야기는 했다"면서도 "(수사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의 파상공세를 차단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덕성과 관련한 쟁점 의혹에 대한 질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김 후보자가 탄 세일링 요트를 조사해보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 요트와 비슷하다"며 "'귀족 검사'라는 인식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온당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지원(가운데)의원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매형 수배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인 입각' 개봉 박두

靑 "8명 검증 중" … 2~3명 입각 가능성
김무성의원 제외·이재오 전의원 미지수

청와대가 내각 개편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치인 8명을 상대로 검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정치인 입각이 사실상 가시화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개각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현역 정치인 가운데 8명 정도를 심도깊게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친이(친 이명박) 및 친박(친 박근혜) 인사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개각에서 정치인 입각은 많으면 2~3명 정도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이 대통령도 집권 2기 여권 내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치인 입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입각 대상으로 친이 진영에서 임태희, 정병국, 원희룡, 주호영, 나경원 의원 등을 입각 대상으로 꼽고 있으며 친박 진영에서는 서병수, 최경환, 진영(재선) 의원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정무장관설(說)이 나돌았던 친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검증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친이 진영의 대표 주자인 이재오 전 의원의 입각 여부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내져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처럼 정치인의 입각이 가시화된 것은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요청이 계속되는데다 집권 2기 국정 장악을 위해서는 당청간의 소통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론되는 정치권 인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형이라는 점도 입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통해 전문성 및 정무적 기능 외에도 탕평 인사를 통해 당내 화합 및 계파간의 소통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는 친박 인사들의 입각설에 대해"대통령이 결정하고 선택받는 분이 판단할 일"이라며 사실상 수용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명도가 높고 참신한 이미지의 정치인을 기용, 정부에 활기를 불어넣고 실용주의 및 친 서민주의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검증 대상자들은 대체로 40~50대로,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질을 인정받은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의 기용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몽준 "선거제 개편, 상향식 공천 등 포함을"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7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상향식 공천제 도입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포함한 개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에서도 (정치선진화를)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화답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야 간 실질적 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제 개편은 투표수를 어떻게 의석수로 전환하느냐를 의미할 수 있는데, 작은 의미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지만 큰 틀에서의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상향식 공천을 해봤지만 각 정당에서 선택해서 하도록 하니까 이를 선택한 정당이 하지 않은 당에 비해 불리해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한나라당은 30%가량 공천한다고 하지만 유럽의 10여 개 나라에서는 여성 공천이 50%로 법제화 돼있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상장기업 공기업 이사도 여성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허태열 "2014년까지 행정체제 개편해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와 한나라당 정치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태열 최고위원은 17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2014년 5월까지 통합하자"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4월까지는 현행 시·군·구를 유지하면, 2012년에 있는 대선·총선의 유력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걸리지 않아 지금이 논의하는 데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위원장은 또 "행정체제를 어떻게 하든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등 여러 가지"라며 "시·군·구를 통합했다고 중대선거구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과 행정구역 개편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체제개편 특위는 어떻게 행정구역을 합치라는 식의 큰 틀의 지방행정개편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특정 시·군을 합치라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기정 "신종 플루 백신 확보 서둘러야"

9월말까지 150만명분 생산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은 17일 "신종 플루 유행이 10~11월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 확보는 9월 말까지 최대 150만명분 밖에 안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유일의 백신 공장인 녹십자 화순공장에 확인한 결과 9월말까지 150만명분, 11월말까지 최대 205만명분을 생산·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1천3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은 공급 물량이 달려 해외 수입도 안된다"며 "유사시에 대비한 백신의 안정적 생산 여건을 확보키 위해 정부는 백신 원재료인 유정란의 상시 공급체제를 마련하고 백신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